

국힘 정운천 의원 “전북 예산 책임질 것”

“예산 확보, 국회의원 존재 이유”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비례대표)이 26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연임과 함께 예결위원으로 선임돼 전북의 예산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정운천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예산을 가져가기 위함이다”며 “자신이 7년 연속으로 예결위원으로 선정된 것은 현정사상

또한, 정 위원장은 시·군의 중요한 산업을 시장 또는 군수와 함께 현장행정을 실행해 직접 확인한 후 예산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지사가 요청한 3급 정책협력관 자리에는 현재 두 사람 정도가 추천됐으며, 앞으로 협력관을 중심으로 명실공히 협치의 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6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은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내년 전주를 재선거 관련 “고민 중… 2024년 총선은 출마” 남원 공공의대 무산 위기에 “이용호 의원이 결사해지해야”

전무후무한 일이다”고 말했다.

또, 산업통상위원회 상임위로 배정된 것에 대해 “농업은 농림부 장관 출신이기에 안 들어가도 영향이 있다”, “산자위는 중소기업, 산업 기계 문제 등의 해당 상임위이다”며 “자신이 탄소산업진흥원을 유치했지만 앞으로 전라북도의 미래는 수소 산업이다”고 말하며 원주지역에 수소와 탄소를 결합한 그린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협력관 자리는 도지사가 국민의힘에 원하는 가고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와 함께 국민의힘이 도지사에게 요구할 것을 정책협력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전주를 4.5 재선거에 관련해선 “자신이 국회의원 뱃지를 내려놓으면 1년 동안 전북의 여당 역할을 할 사람이 없다”며 “비례대표는 1달 전인 3월 5일까지만 결정하면 재선

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다.

남원 공공의대가 여당의 반대로 인해 무산될 위기라는 질문에는 “남원시에는 이용호 의원이 있다”며 “자신보다 이용호 의원이 결사해지해야 하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김경수 기자

“지역발전 필요 예산 챙길 것”

이용호 의원, 국회 예결위에… “남원·임실·순창에 활력”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로 선임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로, 국회의원 전체 300명 중 50명만 참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일찍이 지난 5월부터 이 의원을 예결위원으로 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북 예산 확보와 지역 발전에 공을 들이겠다는 취지다.

이용호 의원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코로나19 재유행 상황 속에서 민생을 지키고 경제를 안정시켜야 하는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국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배정되고,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전북을 대표해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만큼 전북과 남원·임실·순창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꼭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예산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북지역 예산 확보를 위해 정운천 비례대표 의원도 이용호 의원과 함께 예결위원으로 선임됐다.

/김경수 기자

장수 임업기계장비 지원센터 ‘새단장’

박용근 도의원, 도 예산 8000만원 확보 휴식공간 조성 눈앞



장수군 임업기계장비 지원센터가 증축사업을 통해 새롭게 변화했다.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수)은 현장 방문을 통해 육체노동 이후 잠시나마 더위를 식혀줄 공간조차 없던 장수군 임업기계장비 지원센터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전북도 예산 8,000만원을 확보해 휴게공간, 화장실, 샤워장 준공을 앞두

고 있다고 밝혔다.

박용근 의원은 “현장 근무자일수록 휴게시설이 최고여야 한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 곧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 계남면에 위치한 임업기계장비 지원센터는 임목을 생산 매각하고 조립하는데 필요한 기계장비 등을 지원하는 곳으로,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임업기능인경진대회에서 2019년 전국 유일 지자체 수상하는 등 임업기계 가산집재 운용능력에서 인정받고 있다.

/김경수 기자

민주 “尹이 ‘경찰 장악’ 군사작전 뒷배” | 용산 대통령실 앞 찾아 경찰장악 규탄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을 찾아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했다.

특히 시행령으로 경찰국 설치하려는 움직임을 행정 쿠데타로 규정하고, 경찰 집단행동 징계 조치 철회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박용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당 경찰장악 저지대책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대통령 집무실 앞 위치한 용산 국방부 정문 앞에서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준비해온 ‘경찰장악 중단하라’, ‘경찰장악 철회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경찰들의 집단적인 목소리를 듣고 국가 기강문란이라고 했는데, 진정 국가문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 정부 아니냐”며 “대통령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이런 상황이 왔겠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이는 앞서 윤 대통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에서 경찰의 집단행동에 대해 “중대한 국가강권 문란이 될 수 있다”고 대항한 것을 겨냥한 셈이다.

박 원내대표는 “경찰들이 12·12 하나회 쿠데타 같은 발상을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측근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보려주고 있다”며 “(시행령도) 보통 40일 입법 예고기간을 갖는데 4일만에 전광석화같이 전령 치르듯 경찰국을 신설하고 있다. 무엇이 두려운 것이지”고 질타했다.

그는 “대통령이 결사해지 해야 한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의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과 14만 경찰 공무원의 간절한 목소리를 이겨내도 경청해서 경찰국 신설이라는 잘못된 절차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용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 등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다.

이울러 전국 경찰서장회의(총경급)를 주도한 경찰 간부 징계 조치에 대해선 “너무 과도하다. 검찰은 되고 경찰은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논리냐”며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정운영에 혼란을 끼친 것에 대국민 사과를 해달라”고도 했다.

경찰장악 저지대책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 관련 시행령 개정안 심의를 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엄연히 정부조직법 위반이고 직권남용”이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 관련 조치를 모두 국회에서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를 겨냥해선 “대체 어떤 지시를 받아서 이런 조치를 취했느냐. 스스로 (징계) 결정을 했다고 해도 경찰청장 내정자로서 자격이 없다. 경찰서장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게 내정자의 임무가 아니냐

그 임무를 방기한 채 징계를 하느냐”며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서도 “합법적 회의에 참석한 경찰들을 향해 말도 안 되는 ‘쿠데타’ 운운하지 말고, 법을 위반해 종속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려는 ‘행정 쿠데타’부터 바로잡기 바란다”며 “경찰개혁을 진정 원한다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법개혁 특위’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경찰국 강행 철회를 요구했다.

회견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권의 경찰장악 중단하라”, “불법시행령 강행처리 규탄하라”, “경찰이 내린 보복징계와 감찰지시 즉각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뒤 용산 대통령실 앞을 행진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경찰국 강행의) 모든 뒷배는 대통령이었다

는 게 확인된 것”이라며 “이상민 장관이 왜 무도하게 저렇게 군사작전하듯이 밀어붙였는지 궁금했는데 결국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저렇게 했구나 우리로서는 확인한 셈”이라고 성토했다.

향후 대응 방향과 관련해선 “모든 방안을 다 강구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 입장과 의견 즉 여론도 살필 것”이라며 “우선적으로는 법률적으로 대응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국회 절차적으로 대응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정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법은 법률을 위반한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정부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국회) 결의가 이뤄지면 정부는 국회에 마땅히 (시정 결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위법적인 시행령을 확인해 시정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뉴스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전북거점영양성평등센터(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는 전북도 성평등 정책 도민 모니터링단 위촉식을 가지고, 모니터링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지난 6월 전북 4개 지역(익산, 남원, 순창, 고창) 도민을 중심으로 모니터링단을 모집하고 총 20명을 선정했다.

모니터링단은 7월부터 11월까지 모

전북 성평등 도민 모니터링단 위촉·역량강화 교육

니터링 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해 지역의 정책을 성주류화와 성인지 관점에서 평가해 정책 제언도를 제고한다.

역량강화교육은 총 2회차로 구성해 지난 8월 1차 교육을 진행했으며,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과 성인지 관점으로 공익시설을 이해하고 지표를 작

성해보는 실습내용으로 구성됐다.

지난 22일 진행된 2차 교육에서는 1차 교육 후 작성된 지표로 시범 모니터링단 결과를 조별 발표해 지표를 최종 개발하는 토론 및 실습이 이뤄졌다.

모든 교육을 마친 모니터링단은 앞으로 공익시설을 이해하고 지표를 작

의 공익시설을 대상으로 성인지 관점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활동 보고회를 통해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수인 여성정책연구소 소장은 “성평등 정책의 실질적인 체감을 높이기 위해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모니터링은 의미가 있다”며, “모니터링단의 활동을 기대하며 성평등한 전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전북거점영양성평등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도내 자연보호운동 활성화 기여

김정수 도의원, 자연보호연맹 전북협의회장 공로패



전라북도의회 김정수 운영위원장(익산)이 지난 26일 익산시 공예박물관에서 열린 제25회 국민회합과 자연보호운동 활성화 공로패 수여식에서 자연보호중앙연맹 전라북도협의회장으로 공로패를 수상했다.

김 위원장은 제11대, 제12대 전라북도 의원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평소 도민을 위한 자연보호 및 환경보전 노력에 헌신적으로 활동해왔다.

이날 행사는 지난 1988년부터 동서회합을 위해 자연보호중앙연맹 전라북도협의회와 경상남도협의회가 자체 결연 이후 25회째로 국민회합과 자연보호운동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지역사회 자연보호 생활 실천 문화운동에 앞장선 공로자를 선발 공로패를 수여하고 있다.

김정수 위원장은 “도민들과 함께 환경보전 운동을 위하여 당연한 일을 했는데 공로패까지 받게 되어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자연환경 보전의 의식과 자연보호 활성화에 앞장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전북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남원시의회, 임시회 폐회… 업무 보고 및 안전 검사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는 26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2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원 구성 이후 처음 맞는 임시회로, 지난 19일부터 5일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았으며, 청년 메이커스와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등 신축 중인 사업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했다.

2차 본회의에서는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청년메이커스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

의 안전을 심의·의결했으며, 제253회 정례회는 9월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으로 2021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폐회사에서 전평기 의장은 “이번 회기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며, “9월에 열리는 전북 도민체전이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남원=김기두기자

임실군의회, 조례안 6건 등 의결·처리 후 임시회 폐회

임실군의회(의장 이성재)가 26일 본회의장에서 제3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9대 임실군의회가 출범해 여는 첫 임시회로서 집행부로부터 군정 현황과 향후 군정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6건의 조례안과 관련 계획안 1건, 동의안 1건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안건을 의결·처리했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주영 위원장과 정철성 부위원장이 각각 선임됐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김정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임실군민에 대한 약속을 하면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주문했다.

이성재 의장은 폐회사에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침수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 대비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취약 계층에 대한 건강관리와 여름철 발생 가능한 각종 질병에 대한 방역 활동 및 식품 안전 점검을 강화해 군민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실=진홍영기자